

**[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2017. 9.12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프로그램]

| 시 간 | 내 용 | 비고 |
|--------------------------------------|--------|--|
| 13:30~14:00 | | 등 록 |
| 14:00~14:20 | 인사말씀 | 류 석 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 사회: 최 해 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 | |
| 14:20~15:00 | 【발 제】 | “서민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 :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신 영 철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
| 15:00~15:15 | 【토론 1】 | 김 병 우 (현장 근로자) |
| 15:15~15:30 | 【토론 2】 | 김 창 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
| 15:30~15:45 | 【토론 3】 | 이 상 혼 (일간조선 기자) |
| 15:45~16:00 | 종합토론 | |

[목 차]

발 제

“서민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 :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 신 영 철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07

토 론

- 김 병 우 (현장 근로자)..... 29
- 김 창 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37
- 이 상 훈 (월간조선 기자)..... 47

[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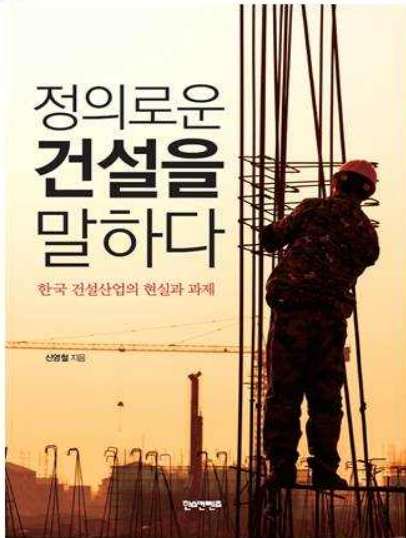
발 제

서민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신 영 철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저자

※ 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정의로운 건설이란?

-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
- 노동력에 상응하는 임금(수입)

- ✓ 왜 건설산업에 **젊은이**가 들어오지 않을까?
-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왜 줄어들지 않을까?
- ✓ 원도급업체에게 많은 **돈**을 주면 과연 그 돈이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될까?
- ✓ 선진국에서는 **당연시하는 직접시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 하는 걸까?
- ✓ **임금체불**이 문제라고 하면서 왜 임금지급보증제도는 도입하지 않을까?
- ✓ 영리법인 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를 걱정하는 만큼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을 고민해왔을까?
- ✓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면 **건설업체가 망할까?**
- ✓ 정부는 왜 건설노동자와 장비운전원의 **실태조사**에 소극적일까?
- ✓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건네주는 나라가 있을까?

왜 책을 쓰게 되었는가?

-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 과연 **평등**한가?
- 건설산업은 그냥 욕만해도 되는 **단순한 산업**인가?
cf) 2015년 2월 (국회)을지로위원회 조찬발표 등
- 건설산업만이 **특수**한가?
타 산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정책관료**와 **전문가**들은 왜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장하나?
적정한 공사비는 **낙수효과(Trickle Down)**를 낳는가?
- 대부분 건설산업관련 보고서에 빠져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cf) 현황 및 문제점 → **(원인분석)** → 대책 → 검토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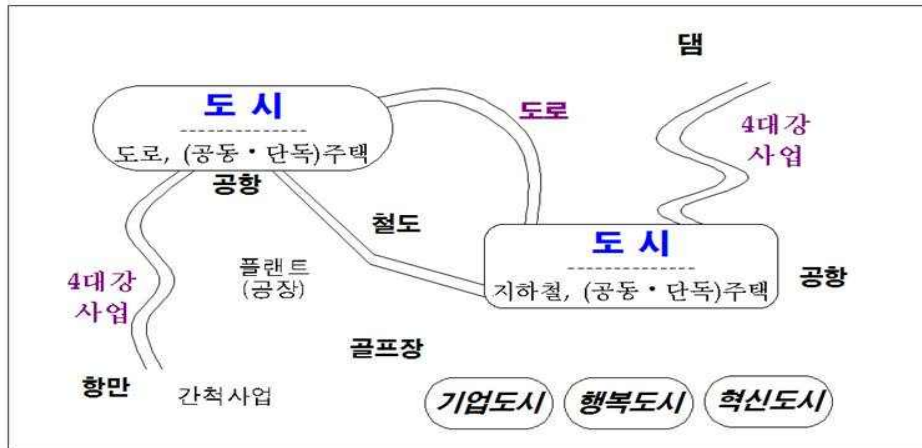


차 례

- I 우리나라 건설산업 현황
- II 건설현장 서민일자리 실태
- III 비정상 건설산업 원인 구조
- IV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영향
- V 서민일자리 보호 및 정상화 방안

I. 우리나라 건설산업 현황

대한민국은 건설 중? → 일자리창출 효과가 과연 있는가?



→ 비전문가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들의 개발공약?
→ 새만금, 고속철도, 행정도시, 동남권 신공항 ...

연도별 기성액 및 종합업체수

* 자료: 통계청 및 민간건설백서 정리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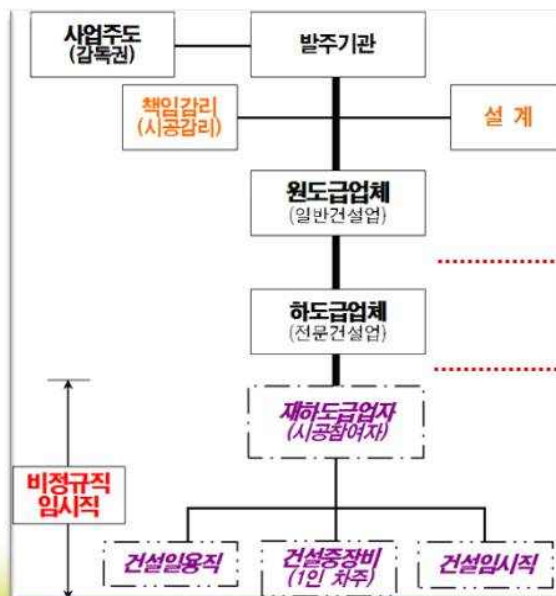
✓ 국내 건설기성액은 GDP대비 13%. 2015년 연간 200조 돌파 → 취업자수는 7%

발주자별 공사기성액

출처 : 통계청(공사실적 있는 경우)

| 구 분 | 공 사 기 성 액 (단위: 10억원) | | | | | | | | |
|---------|----------------------|---------|---------|---------|---------|---------|---------|---------|-------|
| | '06년 | '08년 | '10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구성비 |
| 합 계 | 161,257 | 211,556 | 214,530 | 232,571 | 242,275 | 249,011 | 264,835 | 277,593 | |
| 국 내 | 151,708 | 178,819 | 184,002 | 184,795 | 193,380 | 195,473 | 213,735 | 232,243 | 100% |
| 공 공 부 분 | 53,285 | 63,737 | 76,963 | 69,960 | 72,895 | 69,434 | 71,602 | 68,203 | 29.4% |
| 중앙정부기관 | 8,576 | 8,697 | 12,172 | 10,506 | 10,719 | 9,955 | 10,052 | 9,647 | 4.2% |
| 지방자치단체 | 21,364 | 20,315 | 23,259 | 22,155 | 21,542 | 20,201 | 21,055 | 21,869 | 9.4% |
| 공공단체 | 18,567 | 9,181 | 10,964 | 9,700 | 10,408 | 9,519 | 9,815 | 8,970 | 3.9% |
| 공 기 업 | 4,777 | 25,544 | 30,567 | 27,600 | 30,226 | 29,760 | 30,681 | 27,717 | 11.9% |
| 민 간 부 분 | 97,976 | 114,678 | 106,437 | 114,324 | 120,127 | 125,599 | 141,617 | 163,722 | 70.5% |
| 기 타 | 447 | 404 | 602 | 511 | 358 | 440 | 516 | 317 | 0.1% |
| 해 외 | 9,550 | 32,736 | 30,528 | 47,776 | 48,896 | 53,537 | 51,100 | 45,350 | |

건설산업 생산구조



| 발주방식 | 상층부(원도급) | 중층부(하도급) | 하층부(노동자) |
|------|-----------|----------|----------------------------------|
| 적격심사 | 전혀 없음 | 치열한 가격경쟁 | 치열한 노임경쟁 (저가 외국노동자와 경쟁) |
| 토크 | 없음(가격 담합) | | |
| 기술제안 | 거의 없음 | | |
| 최저가 | 거의 없음 | | |

전체 185만명

〈상층단계〉
국가계약법령 등
보호제도 다수
포진
→ 이득 최대
약 15만명

〈중층단계〉
하도급법령 등
보호제도 일부
→ 빠듯한 이득
약 35만명

〈하층단계〉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과 품질을
담당하나, 보호제도
거의 없음
→ 착취 대상
약 135만명
정책대상
소외

자원조달방식에 따른 분류

| 구분 | 재정사업 | 민자사업 (정부고시+민간제안) | 개발사업 |
|------|--------------|---------------------|-----------|
| 자원조달 | 세금 | 민간자본 (+세금?) | 개발이익 |
| 사업주체 | 공공(정부, 지자체) | 민간(+주무관청?) | 민간(일부 공공) |
| 사업종류 | 도로, 철도, 항만 등 | 도로, 철도, 항만 등 | 주택건설 등 |

재정사업 발주방식별 문제점

| <구분> | <분류> | <발주방식 내용> | <문제점> |
|----------------------|------|---|--------------|
| 설계시공 분리 (내역입찰) | 적격심사 |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확보(적격)한 자 중에서 입찰가가 낮은 자를 선정 | 운찰제 비난 |
| | 최저가 |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부터 가격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운찰제로 전락 |
| 설계시공 일괄 | 턴키 | 설계와 시공을 한 개 컨소시엄 업체가 수행 | 로비와 담합비리 |
| | 대안 | 정부설계보다 나은 설계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방식 | 정부설계 폐기손실 |

⇒ 영리법인에게
비경쟁적
입찰제도

II. 건설현장 서민일자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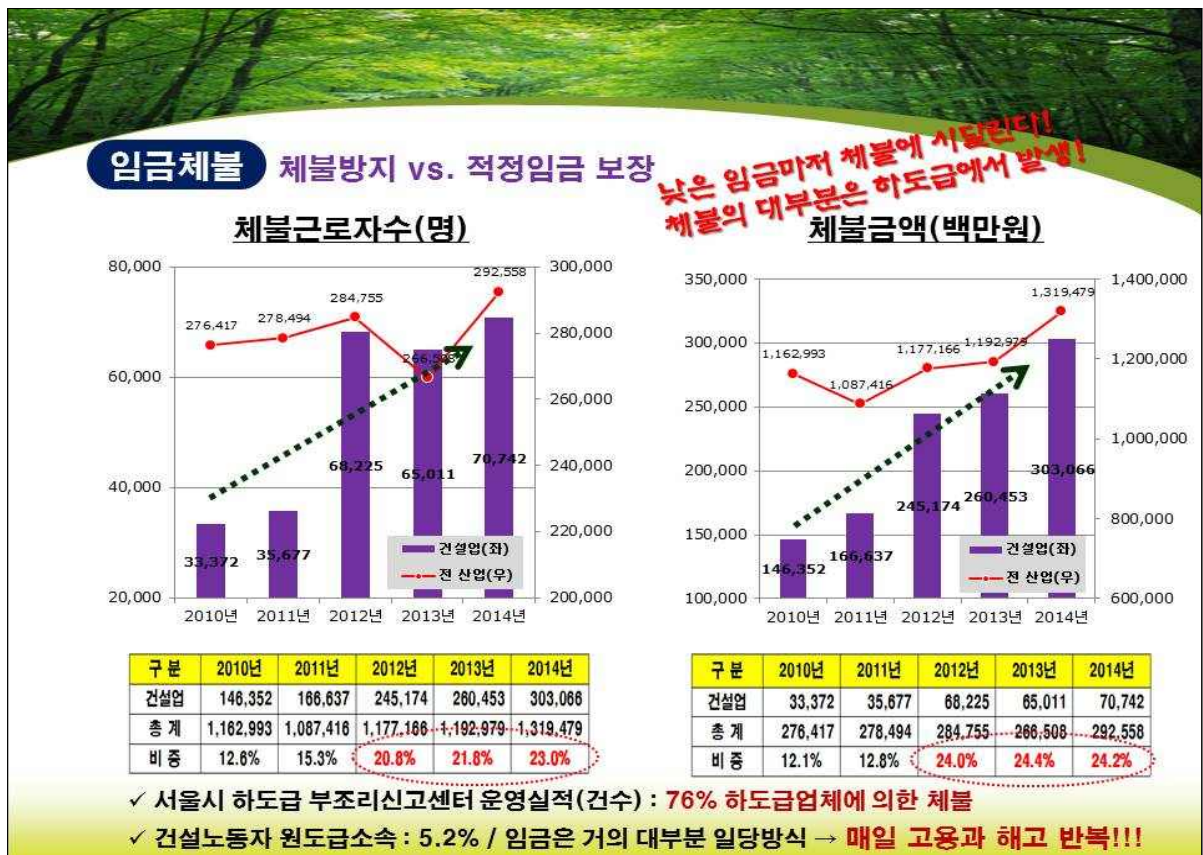
취업자수 현황(전산업 vs.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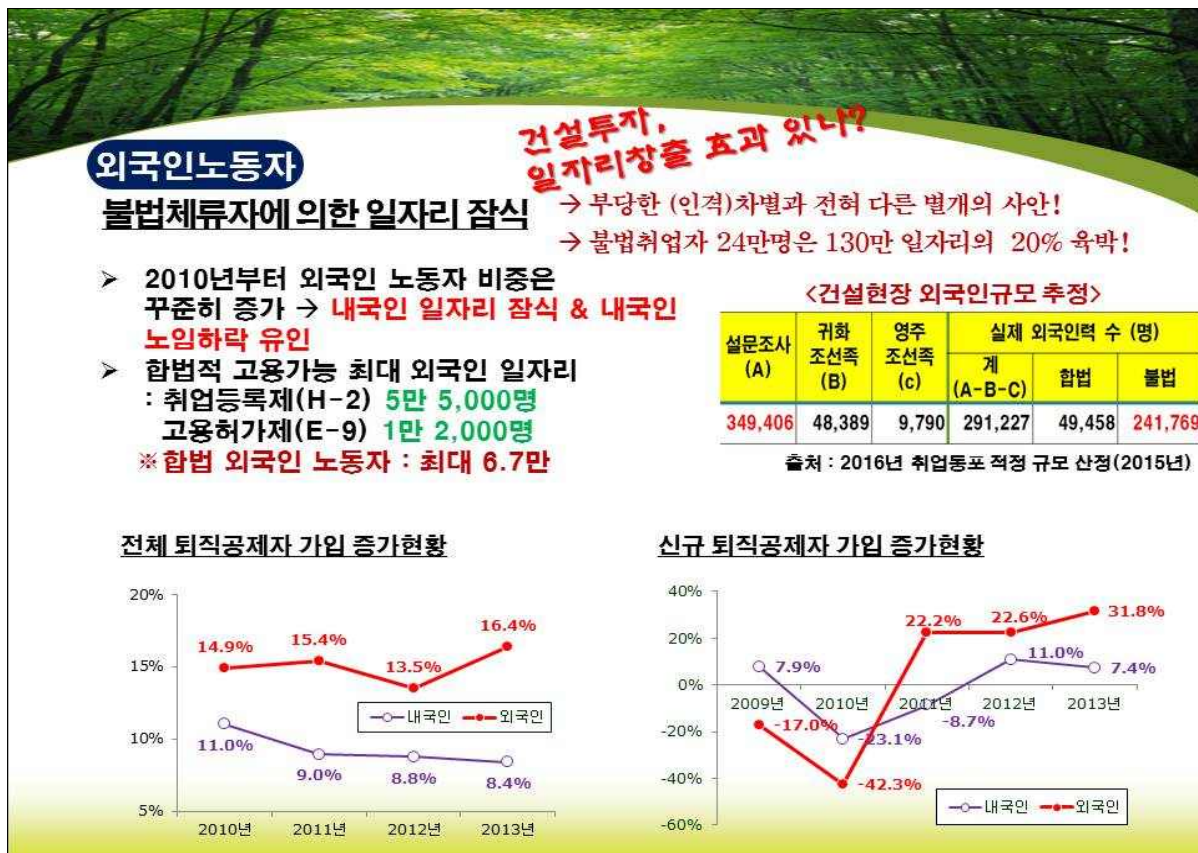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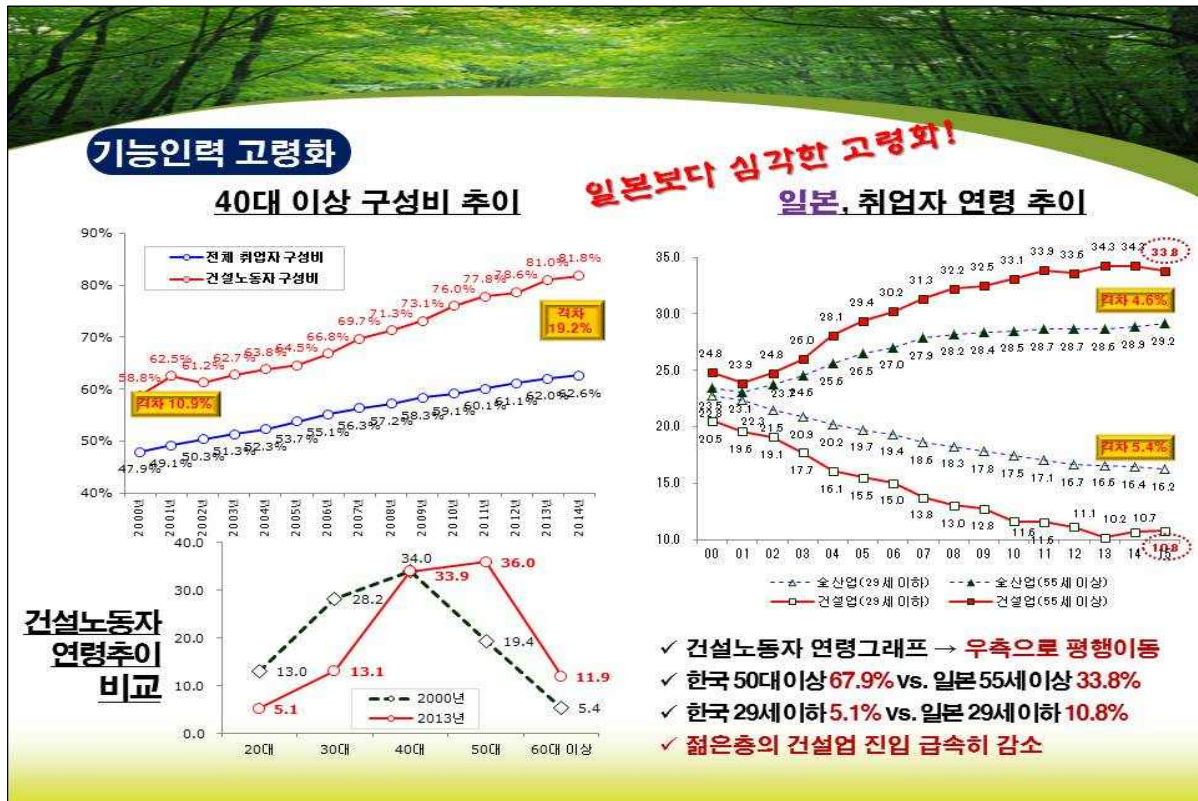
| 구분 | 2000년 | 2002년 | 2004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2년 | 2013년 | 2015년 | 2016년 | 증감 ('16-'00) |
|--------------|--------|--------|--------|--------|--------|--------|--------|--------|--------|--------|--------|--------|-----------------|
| 전 산업 (천명) | 21,156 | 22,169 | 22,557 | 23,151 | 23,433 | 23,577 | 23,506 | 23,829 | 24,061 | 25,066 | 25,908 | 26,235 | 5,079 |
| 건설업 (천명) | 1,580 | 1,746 | 1,820 | 1,835 | 1,850 | 1,812 | 1,720 | 1,753 | 1,773 | 1,754 | 1,823 | 1,845 | 265 |
| 비중(%) | 7.5% | 7.9% | 8.1% | 7.9% | 7.9% | 7.7% | 7.3% | 7.4% | 7.2% | 7.0% | 7.0% | 7.0% | -0.44% |

기성액 및 건설업 취업자 수



- ✓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체의 7%(185만/총2,623만). 2008년 이후 갑자기 감소
- ✓ 2007. 1.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를 전부개정하여,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음. → 불법취업 급증 원인(?)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

-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상이**
 - 원도급이 낙찰받아 계약체결 → 실제 시공은 임의선정된 하청업체가 수행
 - 형식상 기준(하도급율 82% 이상)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하도급 가능
 - 결국, 건설사업장의 실질적 점유자는 하도급업체가 됨
-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 만연(Risk 전가) → 저가 외노자 고용 유인**
- **불법재하도급(심장, 오야지)에서 불법취업자 대량 유입**
-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상실 → 해외경쟁력 상실 → 적자누적**

현장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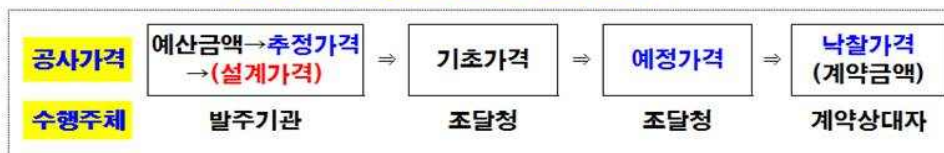
-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축 공사장은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는 외국인이 얼마인지는 점심시간 때 알 수 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는 외국인만 바글바글하다. 내 국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2롯데월드 1년 이상 근무 노동자)
- “언젠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의 SH공사현장[구로향동지구] 방문이 예정된 적이 있었는데, 방문 당일 점심식당 인원이 예전의 약 300명에서 1/3 수준인 100명만 식사를 하였다” (김○○ 건설노조 ○○지부장) →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불법취업자 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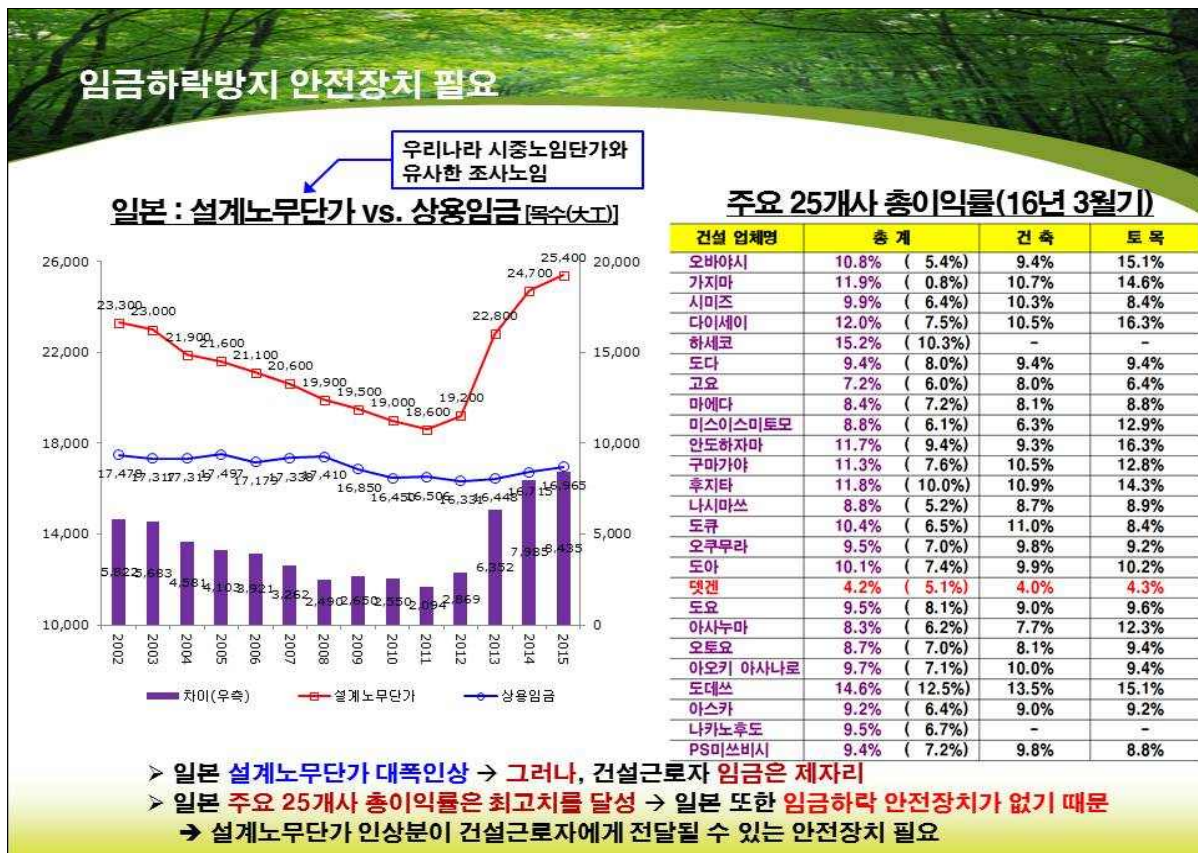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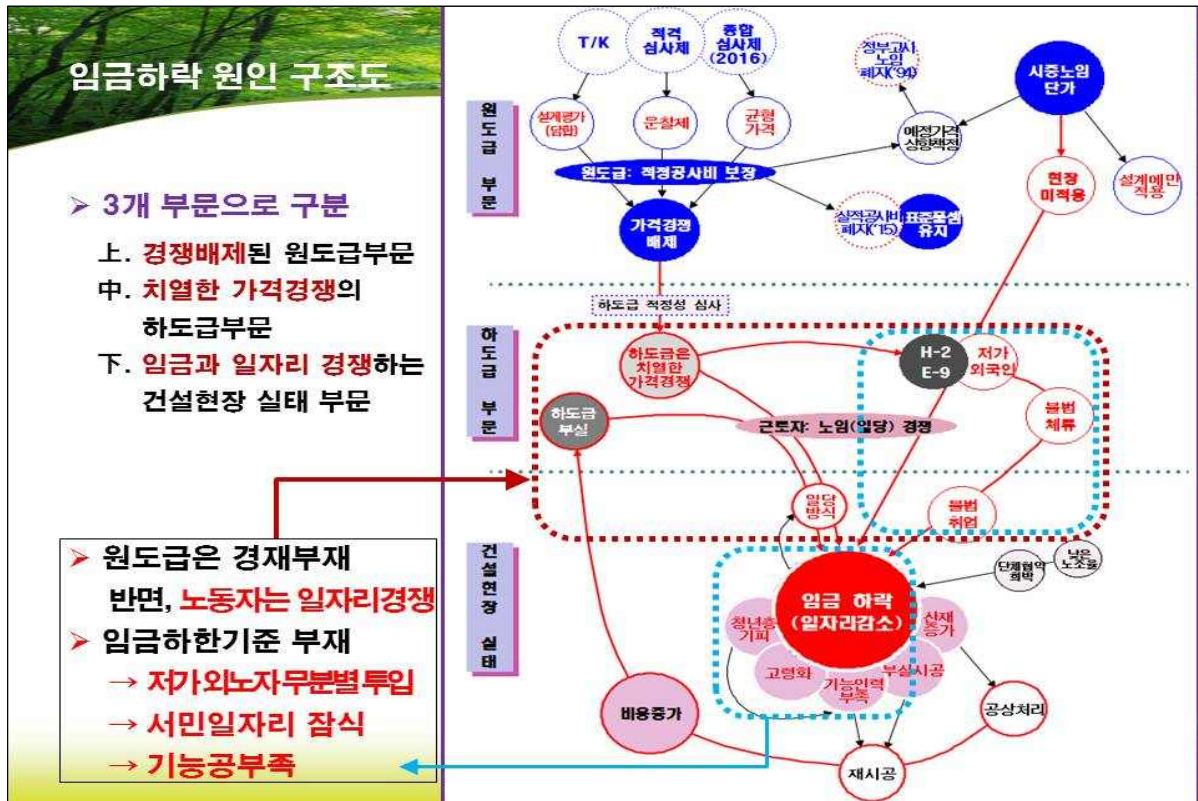
나. 건설산업 비용구조

건설공사비 구성요소 및 비중

| 구 성 | 용어 정의 | 이 율 |
|--------------|--|---------------------------------|
| 건설공사비 (100%) | 직접공사비 (75 ~ 85%)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가 <실제원가를 계산에 반영> | ⇒ • 전액 원가로 사용 • 이윤확보대상 아님 |
| | 간접공사비 등 (15 ~ 25%) : 공사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건설원가 통계로 산정> | ⇒ • 제경비 • 이윤비목 별도 계상 |

입찰과정 및 다양한 공사가격





IV.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영향

고용허가제 및 취업등록제

| 구 분 | 고용허가제(E-9) | 건설업 취업등록제(H-2) |
|--------------|---|----------------------------|
| 대상자 | 양해각서 체결한 국가 (베트남, 타이 등 15개 국가) | 외국 국적 동포 (중국 등 11개 국가) |
| 체류 및 취업기간 | 취업기간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 5년 유효 1회 연장 최장 3년 체류 가능 |
| 도입 규모 | 1년간 2,300명+α (누적 가능) 최대 1만 2,000명 정도 | 최대 5만 5,000명(누적 불가) |

■ 고용허가제(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시행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체가 국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 14일 이상 구인노력을 하고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대상

■ 건설업 취업등록제(H-2)

-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 외국 국적 동포의 급증으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체가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음.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체류자격별 15세 이상 외국인수 (단위: 천명)



체류자격별 외국인 취업자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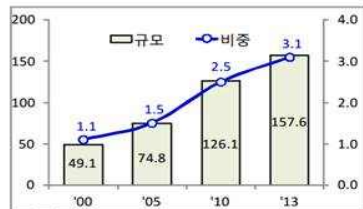


-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가 절반정도 차지하고, 전문인력이나 유학생은 약10%
- 취업율은 전체적으로 70% 이하임.
- 그러나 비전문취업(E-9)은 거의 100% 취업, 방문취업(H-2)은 80% 이상 취업.

국내 외국인 체류자 특징

국내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2015.5.11)

<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및 인구 대비 비중 >
(만 명) (%)



▶ 2000년 : 49.1만명 → 2013년 : 157.6만명(약 3.2배)
연평균 9.4%p 증가

- ① 중국인 비중 49.4%로 확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 비중은 축소
- ② 단순기능인력이 급증 : 2003년 16.0만명에서 2013년 49.9만명, 연평균 12.1% 증가
- ③ 반면 전문인력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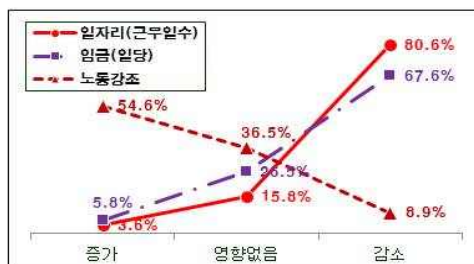
국내 외국인 체류자 현황

| 구분 | 총체류자 | 불법체류자 | 불체율 |
|-------|-----------|---------|-------|
| 2012년 | 1,445,103 | 177,854 | 12.3% |
| 2013년 | 1,576,034 | 183,106 | 11.6% |
| 2014년 | 1,797,618 | 208,778 | 11.6% |
| 2015년 | 1,899,519 | 214,168 | 11.3% |
| 2016년 | 2,049,441 | 208,971 | 10.2% |

➔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없음.

외국인력 유입 영향

건설노동자임금 및 건설장비임대료 등 실태조사(건설노조, 2015. 10.)



▶ 외국인력 유입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 ① 80.6%가 일자리감소라고 응답.
 - ② 임금이 하락한다는 응답은 67.6%. 영향없다는 응답은 26.5%
 - ③ 반면 노동강도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응답이 54.6%. 영향없음 36.5%로 응답.
- ➔ 일자리감소를 가장 우려함.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현황

-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 실태조사 안함
 - 공기업(LH, 철도공단, 도로공사) : 투입현황 조사하고 있음. 도로공사는 홈페이지에 공개
 - 지방공기업(SH공사) : 실태조사 안함
- ➔ 중앙정부에서의 외국인 실태조사 방치가 더 큰 문제임. 문제 심각성 인식 못하는듯함.

다.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 설립

1.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취업사업

- 건설노동자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정적인 일자리확보로 임금수입 증가
- 무료취업센터를 통한 임금착취 방지

2.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 설립

-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습득
: 도제식(현행) →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
- 기능학교 운영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현장투입 교육

3. 건설노동자 실태조사

- 건설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거의 없거나 진척 없음
- 건설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현장의 목소리]

“인력소개소는 일당 9만 5천원(일당 9만원, 식사비 5천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을 뺐다. 순수 일당만을 기준으로 보면 1천원을 더 댔 셈이다. 한 달 150만원을 번다고 했을 때, 인력소개소가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은 17만원 정도다.” - ○○○ 일용근로자 -

출처 : 고용노동부, 제3차('15~'1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금지

INDUS HIGHWAY(N-55) PROJECT MANJHAND-SEHWAN
CONTRACT DOCUMENTS

34 (1) ENGAGEMENT OF LAB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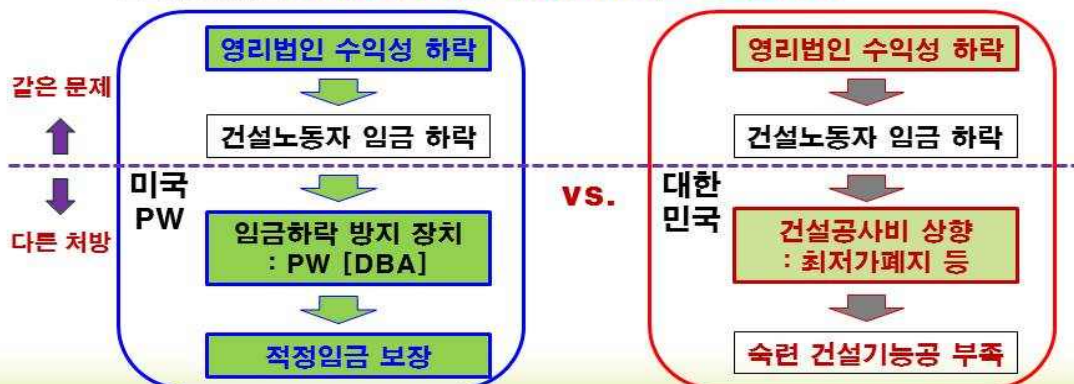
The Contractor is encouraged,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reasonable, to employ staff and labour with the required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from sources within PAKISTAN. No import of common or unskilled labour will be permitted.

라. 적정임금제 법제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Optimum Wage)의 보장(Guarantee)**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



※ 발생문제에 대한 처방이 다름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vs. 영리법인 적정공사비

미국 PW vs. 한국 임금정책



티모시 미 노동부 근로임금 국장
이 제도가 없었다면 시공사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깎아 입찰 가격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 KBS 시사기획 창(2011.9.7) “상생의 조건, 조주각씨와 Mr. 힐러” 中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

[미국의 PW(Prevailing Wage)]

- 뉴욕주 퇴역병원 발주 (1927년)
 - > 앨러배마주 업체 낙찰
 - > 저임금 흑인 노동자 투입 뉴욕주 노동자 임금 하락
- 1930년 대공황
- 1931년 Davis-Bacon Act[PW]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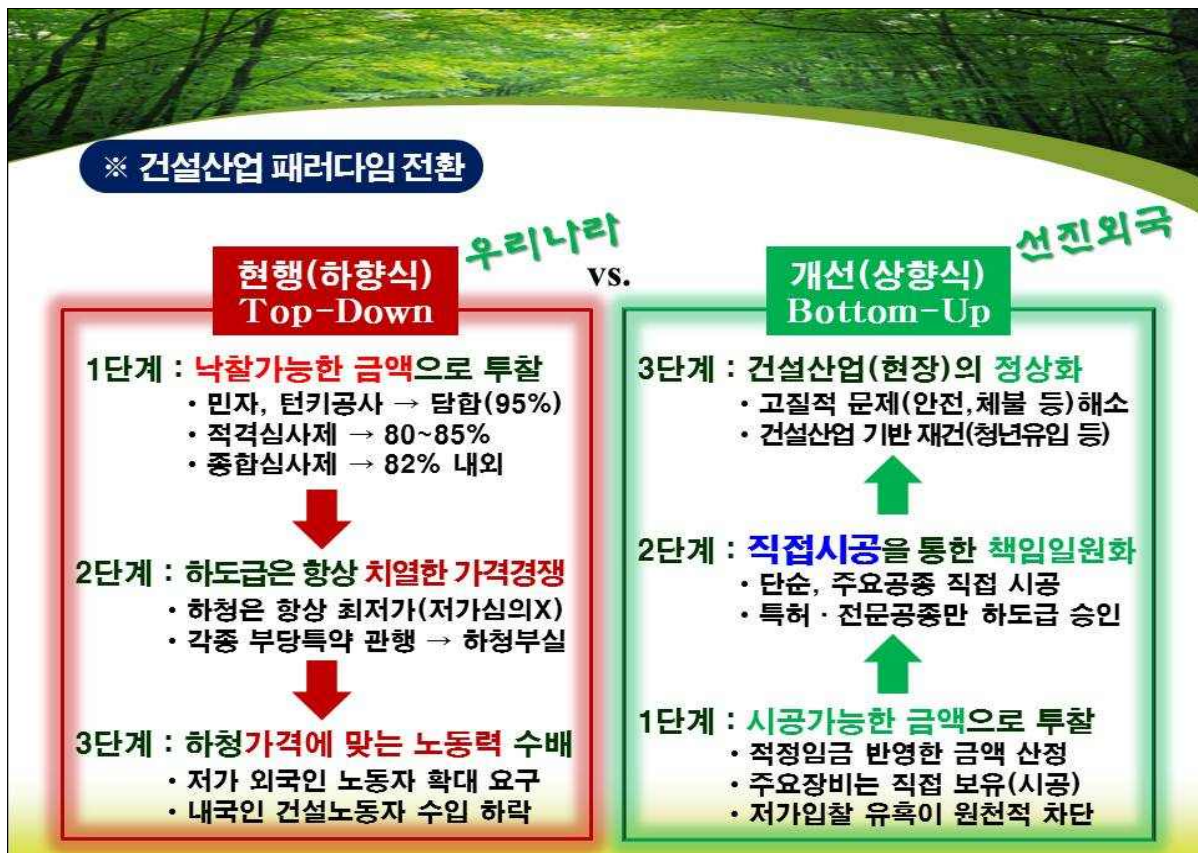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적정공사비]

- ◆ 최저가낙찰제, 노동생산성 저하 등
 - > 건설업체 수익성 감소
 - >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
 - > 건설노동자 저임금 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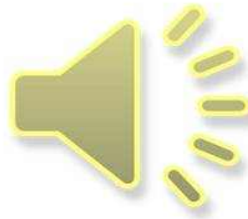
임금 안전장치 논의 없음

티모시(미 노동부 근로임금 국장)
“ **Prevailing Wage**제도가 없었다면 시공사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깎아 입찰 가격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임금제도는 공공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임금은 아예 손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 적정임금 제도를 어길 경우, 그 건설사는 **3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응찰할 수 없게 됩니다.** ”

DBA “연방정부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노동기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건설노동자의 하소연
(2016.4월)



감사합니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토 론 1

김 병 우

현장 근로자

경남 하동에 사는 김병우입니다. 귀농하였고 농사일보다는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서민들은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반증이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최고가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자리 하나 권하지 못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임금문제 □기업문제 □재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서민 일자리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자유한국당의 서민 경제를 위한 토론회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민 일자리보호고 둘째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위 두 가지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민 일자리라 함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건설현장의 노동자, 서비스직, 운송직, 택배업무 등이 해당되리라 봅니다. 저는 이중에도 건설현장의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흔히 노가다라고 합니다. 노가다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빈둥거리다 하루를 공치는 사람들과라고 우스게 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공사장에 하루라도 일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정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그 날로 작업반장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발로 찹니다.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은 다 지어낸 말입니다. 여름 땀별에 비계(아시바 : 가설재, 고소에 임시로 설치된 작업 상면 및 그것을 설치하는 구조물의 총칭)을 타고 추운 겨울에 손이 트도록 일해야 일당 10만원을 손에 쥐 수 있습니다.

일당 10만 원이 많아 보이나요?

10만 원은 목수 단가가 아닌 조공(데모도)들의 평균 일당입니다. 제가 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방학이면 등록금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일당이 5만원이었습니다. 문과대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 였고, 한 달에 25일 일하면 등록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등록금이 문과대 기준 400만 원선이고, 이 금액은 한 달 노가다를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두 달 가까이 일해야 합니다. 두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날씨의 영향으로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물론 등록금이 상승된 것도 문제이지만, 등록금이 약 3~4배 오를 때, 일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노가다를 하셨고 사촌형님은 비계(아시바)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십니다. 사촌형님을 포함 건설 노동자들은 모두 옛날이 낫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일이 수월해졌지만 돈의 가

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관련된 일자리들은 임금이 모두 올랐습니다. 이마트 97년도 직원 월급이 180만원 이었고 지금은 평균 4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농심 모두가 비슷합니다. 90년도만 해도 대기업 임금이 노가다 임금보다 못했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대기업 생산직에 월급이 적어 사원모집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수 반장도 롯데햄 생산직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이 적다고 뛰쳐 나와 20년째 노가다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냥 롯데에 붙어 있을걸, 하고 말입니다.

지금 목수 임금은 15만원~18만 원선입니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300~36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은 있습니다. 하지만 목수 직업의 특성상 1년에 10달을 일하기 힘듭니다. 여름에 장마와 더위로 쉬는 날이 많고, 겨울에 추위로 일을 하지 못 할 때도 많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 벌 기 힘듭니다. 목수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기능공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과장이상인 간부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인이 연봉 4천만 원을 벌지 못 한다면 그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의 임금이 왜 이리 형편없어졌을까요? 80~90년대는 대기업 생산직보다 오히려 보수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봉급에 1/3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파업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키웠다면 지금 보다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장 특성상 뭉치기 힘든 구조와 개별화된 사업장, 임시직이라는 한계가 불평등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단단히 한몫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90년대는 외국 노동자는 ‘남몰래 노가다’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현장에서 ‘상전’이 된 곳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은 돌아가지 않을 지경입니다.

제가 작년 GS건설에서 철도 복선화 공사를 할 때입니다. 원 청은 GS이고 하청이 ‘ㄷ’ 업체인데, ‘ㄷ’업체는 직원 90%정도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채용 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데 말이지요. 목수, 철근 등 모든 현장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야간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 야간 잔업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국인연수생들이 받는 목수 철근 단가는 5~7만 원수준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입니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 하면 7~9만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동에 복선화된 철교는 외국인이 지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허탈하죠. 아 저래서 우리 목수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임금도 적게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디 이러니 업체에 목수단가를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면 되니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인 걸’ 우리 목수들은 가방 싸고 개인집을 짓거나 기술이 더 요하는 일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들도 조공들은 외국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우리 노동자의 임금이 형편없다 보니 소위 ‘노가다’는 젊은이들이 기피 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 인데 목수팀 10명 가운데 막내에 속합니다. 목수 나이들이 60대도 있고 더러는 70대도 일을 합니다. 30~40대도 드물고 20대는 아예 없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실태라면 10년 안에 건설현장 특히, 토목 쪽에서는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 때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없으며 도로건설이 안 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외국노동자로 채워지는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일이 힘들고 나약한 정신 상태 때문일까요? 힘든 일은 기피하는 근로 문화 때문일까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을 설명만한 것이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을 줄이거나 퇴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직업에 귀천을 심화시켰고 가진 것 없고 배고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파급 시켰다고 봅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자는 많지만 청년들이 택해야 할 직업군을 정부가 없애 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건설현장의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직업으로 인정받고 기술을 쌓으면 장인으로 대접받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어야 할 사회기초산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곳에 기능인으로 일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움 시설조차 없습니다. 대학에 토목과 건축과는 있지만 건설 기능인 양성 학교나 학과는 없습니다. 실업자를 위해 4주짜리 건설기능학원은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통해 형틀목수나 철근 미장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런 인력들을 현장에서 키우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재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고 복지를 확대해 주면 우리 청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리라 봅니다. 외국인이 90년대부터 잠식하기 시작한 건설현장을 차분하게 정책을 세워 우리 노동자로 채워지는 직업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글로벌시대가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 줘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적정 임금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일하면 5백만 원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또한 일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휴서

기와 흑한기는 한 달간 쉬도록 제도화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뛰어나면 임금이 따라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목수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leaving small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토 론 2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보수와 진보 모두를 넘어서

김 창 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 외국인노동자 도입 과정과 현황.

◎ 1991년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물꼬가 트였음. 당시의 상황은 1980년대 노동자대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임금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갈 것인지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음 KDI 황수경연구원(현재 통계청장)의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고임금을 피해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갔고 이로 인해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 됨

◎ 외국인노동자도입 초기 (1993~2000.4)

-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임금이 급속히 올라가자 3D 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단순기능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외국인을 정식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제도를 만들어 도입
- 외국 인력을 제도화하는 데 많은 허점을 보이면서 불법체류자의 만연, 브로커를 통한 송출비리 문제, 사업장내에서의 내·외국인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임

◎ 외국인노동자정책의 갈등 확대시기(2000.4~2004.8)

- 연수생에 대한 쿼터가 기업 측에서 충분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함. 한때 불법체류자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연수생제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게 됨. 연수생제도를 둘러싸고 인권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됨

◎ 고용허가제의 신규도입 이후(2004.8~현재)

- 산업연수생제도가 문제를 일으키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됨. 일단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2006년까지 병행되다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됨
-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특례고용허가제’가 시행됨
- 국내에 무연고가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도입. (2007 3월부터) 이 제도에 의해 고용허가제는 일반외국인의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의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 됨

-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고용허가제로 통일된 저숙련 외국인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기

【표 1】 중소기업중앙회의 2013년 조사.

| | |
|-----------------------|------------------------------------|
| 한국인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의 평균급여 | 외국인 188.8만원 (162.1만원 +숙식식사(26.7만)) |
| 192.2만원 | 한국인의 98.2%수준 |

【표 2】 통계청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15세 이상 외국인 137만3천명...고용률 68.3%

- 산업별 취업자

| | | | |
|----------|-------------|-----------|--------|
| 광업 및 제조업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도소매 숙박 음식 | 건설업 |
| 43만6천명 | 18만명 | 17만 9천명 | 8만 6천명 |

- 외국인노동자 평균임금분포

| | | | |
|-----------|-----------|----------|----------|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53.1% | 34.3% | 7.8% | 4.9% |

◎ 외국인노동자의 전체 증가속도와 업종별 비율

-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비율의 증가 5.13%(2005) > 19.46%(2010) > 20%(2011)
: 2016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3.9%인 200만 명을 돌파.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임 법무부는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임
-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비율(2010년)
: 제조업 17.15%, 서비스업 24.35% 어업 76.22% 농축산업 67.04% 건설업 57.34%
- 사업장이 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고 클수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2010) 30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1.70% 5인 미만 사업장 40.85%
☞ 중견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총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온정적일 수 있는 배경임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나, 3년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 동안 체류

- 중국 교포 송금을 50%(2013년) 평균 76만원
- 인구 1억3천의 일본에는 불법체류자 6만 명 인구 5천만 국의 경우 22만 명. 인구 대비 8배

◆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영향과 논란

- 외국인노동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편익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비용의 양 측면이 존재함.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심화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오로지 ‘불쌍한 외국인노동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음. 이러한 사이 진보측 사이트나 보수측 사이트 모두의 일반인들은 과도한 외국인노동자 편애정책에 분노하는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노동력도 시장경제의 상품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제이론에 근거할 경우 외국 인력이 과도한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권단체를 위시한 진보 측의 공세로 외국인노동자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란 이미지를 얻고 있음
- 현장의 노동자는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인 일반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본인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대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임
-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일치하고 있음. 보수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실을 우선시하고 진보는 특유의 국제주의적 온정주의 때문에 그러함. 좌우기득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향 때문에 대중들은 오히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임. 이것이 트럼프현상의 배경임.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음
- 진보 측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내국인 대체성을 인정하지 않음. 그 사례로 드는 것이 쿠바난민

의 플로리다 유입임. 쿠바를 떠나기를 원하는 쿠바인들을 쿠바정부는 80년초 내보내기 시작함. 이들은 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정착하기 시작함. 마이애미에 몰린 쿠바노동자를 조사한 데이비드 카드의 연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의 대체성을 부인함. 즉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어도 내국인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임. 그러나 이후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짐

- 한국의 최근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하위단순 미숙련노동에 있어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대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임. 이규용·박성재(2008)는 외국인력 고용분포를 추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증가와 내국인 생산직인력의 고용비중의 감소를 보인 후 외국 인력에 따른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을 주장. 외국 인력의 유입증가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같은 단순 저임금직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노동자 문제 관련 생각거리

▪ 프레임설정 외국인노동자인가? 이주노동자인가?

: 지식인출신 지인과의 만남. 지인은 고학력자였으나 중년남성으로 막노동을 하고 있음. 몇 년 만에 만난 지인은 건설업에 너무 많이 유입된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건설노동자들 설 자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함. 이 문제에 대해 자료조사를 거쳐 진보언론에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서 기고했으나 기사제목은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없다고?”였음. 제목만으로 본다면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준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이미지를 느끼게 만드는 주장임. 한국 지식인사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향을 확인한 계기

▪ 국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수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단되어야 하는가?

: 뉴질랜드는 상당히 진보적인 국가임. 90년대 중반에는 수만 명이 모여 넬슨 만델라 석방을 외치고 한국의 노동자 탄압 때 영사관투쟁을 벌이기도 하는 나라임.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놀란 적이 있음. Border Patrol(국경감시)란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이 인기임. 한국 진보언론의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 익숙하던 사람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화두였음. 진보가 주장하는 톨레랑스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프랑스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세를 받아 챙기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만 적실성을 갖는 이야기임.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물러날 때 식민세를 내지 않으면 도로 학교 등의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지독한 행태를 보임

▪ 외국인노동자문제는 『가난한 제3세계 빈민 vs 부유한 국가의 시민』인가?

: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할 때 한국에 오기 위해 5년, 10년에 달하는 임금을 써서 왔다고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음.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 가난한 서민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그 나라 중상층의 경우만 가능한 이야기임. 게다가 돈을 준 상대는 자국민 불법브로커 조직이었음. 현재 고용허가제가 한국어능력시험과 연동되어있는데 몇 년간 교재를 사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중상층만 해당됨. 현재의 구도는 가난한 한국 서민과 제3세계 중상층의 갈등관계임을 직시해야 함

■ 개인의 인도주의적 결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우연한 기회에 노동자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음. 20대 후반의 푹푹해 보이는 건설노동자 한 사람이 건설노동자 사이의 외국인을 줄이자는 주장을 자신은 반대한다고 함. 자신 역시 힘들지만 그런 주장에 반대한다고 함.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 돈을 버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건설되어야 함. 개인의 윤리가 대처할 수 없는 아젠다에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외국인노동자가 만드는 사회적 비용은 개인화, 아니면 사회화되어야 하는가?

: 현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임. 세계화는 기업에 넓은 시장을 제공하는 기회도 되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 역시 속출하게 되는 시스템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국가단위의 협약이자 정책베이스임. 이것을 개인의 윤리적 결단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보의 가장 큰 잘못임. 세계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함. 세계화를 통한 이익도 적절하게 사회화되어야 하지만 비용 역시 적절하게 사회화되어야 함

■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서민은 어느 계층일까?

: 저임금 단순노동자가 진보가 돌보아야 할 진짜 하층노동계급 그러나 한국 진보는 외면함. 한국에 강남좌파가 있듯 유럽에는 삼페인좌파 미국에는 리무진좌파가 있음.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생겨난 지식정보 중심의 화이트칼라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에만 맞추게 되면(동성애지지) 평범한 노동자서민은 지지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됨. 금융자본과 미디어자본의 지지를 받는 진보후보인 클린턴은 철저히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중에게 보였음. 한국 역시 상층 조직노동에 대한 과도한 편향과 지식인중심의 아젠다가 일반 서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음. 자국 임금과 비교하여 방글라데시 근로자 11.2배, 인도네시아 10.5배, 네팔 10.0배 등 최고 11.2배에서 최저 3.4배까지 평균 6.4배의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 조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받는 기회와 편익은 한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편익에 대한 침해와 연동되어 있는 것임

■ 국가는 악인가?

: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란 개념은 국가는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서만 나올

수 있는 개념임. 나폴레옹의 유럽정복 전쟁 이후에서야 제대로 된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국가가 출현하자마자 제국주의로 돌아선 경험을 가진 서구에서 국가나 민족은 은근히 선호하지 않은 존재라는 편견이 깔려 있음. 서구에서 음모론 영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부정적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은 1천년의 민족국가 단위를 형성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음. 중앙 집중이라는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만 국가 단위의 효율적 행정만이 서민들의 안정적 삶을 담보할 수 있음.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 개념은 민족에 기반한 국가단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임. 소속국가를 부정하는 이 개념들이 지속되면 국가는 문제해결의 단위가 되기 어려움. 이 개념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임

■ 한국인이 일을 안 해서일까?

: 불법체류자가 일단 합법화되면 한국은 국제적 타깃이 될 수 있음. 호주가 일단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도 일단 내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됨. 외국인이 그나마 영세중소기업의 작업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환율차이 때문임.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냥 한국의 빈곤층이 되는 것임.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은 배가 불러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 말임. 생산성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발생. 저임노동력이란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 유지될 수 있음. 좀비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내국인의 경우 더욱 기피하게 만들. 영세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memo

[illegible]

[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토 론 3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행복한 나라?

이 상 훈

월간조선 기자

논쟁이 금기시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불법체류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시 되는 주제가 된 지 오래다.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라 부르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 사회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경제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현직 기자인 필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지만, 이를 기사화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했다. 일단 회사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독단으로 이 문제를 기사화할 수가 없었고, 데스크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의 개인 칼럼 형식으로 간간이 이 문제를 언급해왔는데, 이마저도 사실 국내 기자 중에는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본 토론회에 초청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조선pu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한편의 칼럼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한국은 과연 일자리 부족국가인가?>라는 칼럼을 <조선pub>에 실었다. 이 칼럼의 부제는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도 불체자 문제 해결 못 하면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붙였다.

이 칼럼은 조회 수가 10만 건을 넘었다. 신생 <조선핍>이라는 사이트가 외부에 그다지 많이 알려진 매체도 아니고,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은 <조선핍> 사이트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SNS나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베’나 ‘오유’처럼 완전 정반대 성격의 사이트에서도 이 칼럼을 퍼갔고, 그곳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칼럼에 달린 댓글을 보니 소위 말하는 진보 쪽 사이트에서는 이 글에 대해 진보 측이 주장해온 내용을 드디어 조선일보 같은 보수 사이트에서 다루었다는 논평을 많이 한 것이고, 보수를 표방한 사이트에서는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에 옹호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진보적인 기사를 싣다니 놀랍다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은 진보나 보수가 차이가 없었으며 뒤집어 말하면 이는 진보·보수의 대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하도 이야기하고 다녔더니, 주변에서 필자를 무슨 인종 혐오론자가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필자의 친누나가 미국 백인과 결혼을 했고, 필자의 사골 고향 친구 6명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는 등 필

자는 누구보다 외국인을 대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의 뿌리가 사실 무차별적인 외국인 고용과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온정주의와 ‘다문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문제는 일종의 금기시 되는 문제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깊게 남아 있고, 사회단체나 언론은 이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자라날 토양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

필자가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경험 때문이다. 10여 년 전 이탈리아 여행을 간 적이 있다. 필자 일행이 탄 버스가 밀라노인지 어느 역사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타고 도시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웬 젊은 여자 한명이 필자 일행의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스에 앉아 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한국 가이드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가 현지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내에 들어오는 관광버스에는 자국민 안내원을 태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 한명의 가이드직조차 소중히 여기고, 자국민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모습을 보고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필자의 지인 중에 아이 둘을 낳고 일찍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기르며 생활하는 여자가 있다. 우연하게 이 여자가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집에 TV는 하도 낡아 상단 3분의 1 정도가 나오지 않았고, 냉장고는 1990년대 생산한 구형 금성냉장고였다. 이 여자는 아이들 학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10만원만 넘어가는 신발이나 가방은 모두 사치품일 뿐이었다. 이 여자가 구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서빙업 정도였지만, 그나마 100만원을 넘기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불법체류자가 장악한 영세 서비스업계에서 한국인이라고 대접을 조금 더 해주며 쓰는 곳은 이미 없었다. 결국 이 여자의 아이들 둘은 모두 중졸로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일종의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된 것이다. 이 여자를 보면서 만약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학원에 다니기를 원했다면 어머니 된 입장에서 여자의 몸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곤 한다.

세 모녀 자살사건을 보며

수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정부의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질타하며, 적어도 복지체계를 몰라서 극빈(極貧)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등 한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자살한 세 모녀의 경우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성인 세 명이 한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 모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이나 일당이 낮은 아르바이트 일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일로 우리나라에서 한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세 모녀 사건과 제가 아는 지인의 문제를 볼 때, 복지체계 점검도 시급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밤낮없이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지 그 근원을 직시할 때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합친 경제적 취약 계층이 전체 가구의 40%에 이른다. 정부가 직업 돈을 쥐서 먹여 살리는 사람 숫자도 4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선정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한다.

한 사회의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주 40시간 일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처럼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라면 그에 맞는 최소한의 문화생활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법은 이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합법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노동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임의로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2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사장에게 성폭행당해 자살로 젊은 생을 마감한 대학생은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월 60~70만원을 받았다. 당시 언론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직의 문제점을 쏟아냈지만, 그때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알바’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에서 식당업을 하는 필자의 친누나

1984년에 미국에 이민을 간 우리 누나는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술집과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재작년 미국 누나 집에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누나 가게의 식당 종업원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삶의 여유를 즐기며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일단 일을 하는 이상 먹고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미국에 머물면서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 두 명을 키우는 어느 지인의 삶과 너무나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혼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그 지인을 통해서 어렵פות하게나마 느낄 수가 있었다. 어떻게 다 같은 노동을 하는 직군(식당 서비스업)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삶의 여유까지 즐길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필자가 미국에서 관찰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강력한 노동법 운용이었다. 미국에서는 일하는 종업원들이 어린 학생이든, 나이든 할머니든 나이로 인해 임금 차별을 받지 않았다. 종업원의 임금은 사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또 하나 미국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미국의 독특한 ‘팁 문화’에 있다. 미국은 팁 제도를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법에 정한 시간당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발견한 두 번째 해답은 바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필자의 누나는 20년 넘게 술집과 식당을 하면서 단 전성기 때는 20명이 넘는 종업원을 두었지만, 지금까지 한명의 불법체류자도 고용해 본 적이 없다. 이는 누나

가 미국의 엄청난 애국 시민권자여서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마어마한(약 1만 불) 벌금을 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식당 서비스업종은 거의 제한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들의 무제한 고용은 비단 식당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중소제조업, 공사장 등 육체노동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이 만연하지만, 누구도 이를 범법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언제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 서비스업이나 기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일자리 부족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국가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구 위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하늘만 쳐다보며 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다. 외국인이 2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외국인이 장악한 건설 인력 시장

필자는 작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력시장 4군데를 취재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건설업체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 한국 건설 기능 인력들의 대가 사실상 끊어지다시피 했다. 저렴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무차별 고용으로 한국인들이 밀려난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건설업 노동자들은 중상류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14년 7월경 취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일용직 노동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달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한 구직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10년 전과 똑같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는 제자리라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구직자는 “중국동포들 때문에 건설현장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명이 일하는 건설현장에 한국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얼마 전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형마트 판매직은 주부들이 그나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다. 청소나 경비 등 아직은 외국인이 진출하지 않은 수많은 비정규직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포기한다(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어머니가 팔이 부러지면서 노동력을 상실하자 곧바로 생계문제에 직면함).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인식 필요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의 상당수 근로 인력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과 내수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진다고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도 하청 기업이 저임금 체계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인건비 경쟁력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Made in Korea’ 제품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경기도 안산이나 안성, 서울 대림역을 가보면 이미 그곳은 거대한 외국인 집성촌으로 변한 지 오래다. 우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세금을 들여 그 많은 공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구상에는 싼 인력은 끝없이 널려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전적으로 그런 싼 인력에 의존해서 자국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나마 대부분이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크지 않은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

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순부터 3D업종 기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에 시달렸고,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왔다. 당시 공교롭게도 한두 자녀 세대의 증가로 자녀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풍토가 겹쳤고, 또한 대학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보다 대학 진학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일단 대학 간판이라도 걸친 사람들은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산업현장에 인력이 더욱 모자라자, 더욱 많은 인력을 수입했고 숫제 나중에는 한국인 고용 의무 노력은 그냥 형식에 불과했고 모든 생산직 직원이 100%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활동이 자국민 고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의 5년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출국률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정부가 하다못해 자발적으로 한번 나갔다가오는 시늉만 해도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따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다. 이 지구상에 불과 3~5년 남짓 일해서 본국에 집을 사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이 지난 20년간 반복되면서, 우리나라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는 불법체류자 천국이 되어버렸다.

2007년 100만 명이던 외국인이 9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는데 연평균 8% 증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현재 불법체류자 증가율로 5년 안에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전인구의 6%인데 이는 애당초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 프랑스 못지않은 숫자이며, 이민이나 난민을 대량으로 받는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높은 외국인 비율이며 증가율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만 가지 경제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데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100만 개를 만들어봐야 내국인의 고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 만큼의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만 늘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값싼 인력을 끝없이 공

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 바탕 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저임금 경제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 세계 저임금 근로자 집합소가 될 것인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질 소득수준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 하여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는 경제원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 소득확대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자리도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제 당국자들은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추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서비스업이든, 일용노동자이든, 건물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서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자선(慈善) 단체가 아니다. 경제발전 효과가 자국민들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나가면, 머지않아 우리의 노동현장은 한 달 임금 50~100달러짜리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노동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본은 인간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냉혹하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 기업들은 생산단가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화성인까지 데려올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미혼모, 이혼녀, 노인, 저학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과 저임금 일자리 경쟁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정책은 지난 20년간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진행됐다. 산업현장을 온통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육체 노동자부터 대우해야

지금부터라도 무한정 이어지는 불법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 당국자와 위정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노동풍토를 갖추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힘든 육체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정당한 대가)을 받아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발해 질 것이고, 이는 위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과 노인들까지 산업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육체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들이 먼저 생활고에서 벗어나야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노인들이 길에서 폐지를 주워 연명하고, 한 가정의 미래를 책임진 가정주부들이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2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일하는 나라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온 노인들에게 잡일 하나 주지 못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해야 되겠는가?

이와 더불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졸자 못지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뿌리 깊은 학벌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선진국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대만이나 스위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떠받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그저 불법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처럼 희망 없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